

與 혁신위 “전략공천 원천 배제해야”… 당 지도부 ‘난감’

‘상향식 공천’ 통한 공정경쟁 제안
대통령실 인사 ‘낙하산 논란’ 차단
당정 관계 수평적으로 회복 의도
당 지도부, 전략공천 포기 어려워
‘100% 경선’ 실현 가능성 낮아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스

‘수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

라고 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에 대해 “위에서 내려오는 공천보다 당원과 지역구 민심을 가장 큰 틀로 하는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위의 권고대로 중진·친윤 인사들이 물려난 자리를 경선으로 채워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00% 경선은 중진 의원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혁신위 원은 “그래서 지금까지 (혁신위가) 중진들이 희생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혁신위는 4호 혁신안 발표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과거 김 전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기도 했고. 또 김 전 대표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주변 권력이 희생해야 한

다”며 중진·친윤계의 용퇴를 촉구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지역구 경선’을 의미한다. 중앙당 기구에서 출마자를 결정하지 않고 지역구 경선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이기도 하다.

문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총선 전략 중 하나인 전략공천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정당은 총선에서 경선과 전략공천을 병행해왔다. 통상 경선은 그 지역구에서 활동해온 이들이나 현역 의원이 나서고, 경선과 관련된 세부 규칙을 당에서 정한다.

반면 전략공천은 상대방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 후보를 내놓기 위해 지역 연고나 활동 여부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략공천을 ‘낙하산 공천’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 ‘맞춤 후보’를 내놓고, 해당 지역구를 ‘격전지’로 만들어 화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또 경선은 출마를 희망하는 복수 후보가 있는 지역구에서 가능하다. 열세 지역이거나 강력한 야권 후보가 있을

경우엔 경선이 쉽지 않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인재영입을 추진 중이다.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해야 한다면 기존 당협위원장에 비해 지역 활동 기간이나 연고가 약한 인사들은 합류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전략공천원천 배제는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힘지출마 권고 이행이 전제돼야 효과적이다. 전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할 경우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혁신위의 권고가 이행돼야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꺼내들어 당 주류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혁신위의 권고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당사자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만일 일부 중진·친윤계 등이 권고를 받아들여 힘지출마하더라도, 새로운 지역에서 경선을 뚫어야 한다는 데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결국 ‘100% 경선’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非명계, 세 확장 본격화… 청년 정치인과 당 지도부 비판

원칙과 상식, 청년 간담회 열어
조응천 “당내 민주주의 역대 최악”
최근 논란된 ‘청년 비하’ 현수막 비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

국대학생위원장 등을 비롯한 당 안팎의 청년 인사 10명이 참석했다.

예상대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가 역대 최악”이라면

서 “친문(친문재인) 패권·친박(친박근혜) 패권·친명(친이재명) 패권까지 다 경험해봤는데, 친명패권이 가장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론했다.

이어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제”라며 “갑론을박하면서 필터링이 이뤄지면서 정당 결정의 오류가 수정되는 과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현수막 시안이 청년 세대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두고도 “실제 독임제 행정관과 비슷한 패권이 강한 유일체제다 보니 무오류라는 편견에 빠져있다”며 “잘못되면 사과할 줄을 모르고, 그대로 얘기하면 들킬 않는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논란이 된 ‘청년 비하’ 현수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거대 담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때) 탈모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며 “지난 대

선 때는 민주당이 뭘 공약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국가비전을 얘기하지

않아서, 자질구레한 얘기를 했으니 기억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나를 위해 이재명”이 슬로건이었는데, 당시 의원님들은 ‘2030은 국가비전이나 거대 담론보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며 2030이 타깃이라고 했다”며 “2030이 개인 이기주의에만 매몰됐으면 공정과 상식은 뭐고, 젠더갈등은 뭐고, 반종정서는 무엇이겠나. 그게 다 거대 담론인데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현수막도 대선 때 있었던 ‘나를 위해 이재명’ 슬로건의 연장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성균 화성시의원도 “현수막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당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제·정치는 잘 모르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행정 전산망 먹통에 與 “송구한 마음” 野 “尹 직접 사과해야”

與 “복구 총력… 근본 대책 마련”
野 “안내문자 없이 각자도생 권해”

F 구성을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장애 원인 점검과 사태 파악을 위해 신속히 나섰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장애 복구를 위해 투입된 전문가들이 서비스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며, 다행히 18일 오전부터는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한 상태”라면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는다. 여전히 원인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

될지 기약도 없다”며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한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산망 마비로 부랴부랴 귀국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 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정부는 행정망 마비 사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아서, SNS를 통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다”며 “안내문자 한 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다”고 질타했다.

/서예진 기자

치를 공유하고 있는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내각으로부터 행정 전산망 마비 등 국내 현안과 경제 상황을 보고 받으며 민생현안을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영국 국빈방문에 이어 23일 프랑스를 잇달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방문을 통해 ▲신시장 확보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 ▲무탄소에너지 연대 등에 중점을 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

윤 대통령은 23일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파리 주재 각국 국제박람회 기구(BIE) 대표들과 만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오·만찬 행사와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갖는다.

/박정의 기자 pathfinder@